

東進하는 민주당 vs 西進하는 국민의힘, 중앙에서 백중지세

총선 서울 판세 분석

②한강 이남

서남권, 정권심판론 바람 불어
與 중량감·신선한 후보로 공략
중남권, 대부분 접전 지역 꼽혀
용산·영등포를 與野 재대결 치러
강남·서초구 '보수일변도' 유지
野 홍익표, 서초을서 선전 '기대'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용산 후보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용산구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 힘으로 용산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 서초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13일 서울 서초구 상문고등학교 앞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한강 이남 27개 지역의 판세 분석 결과, 서울서남권(강서갑·강서을·강서병·구로갑·구로을·양천갑·양천을·관악갑·관악을·금천)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중남권(용산·동작갑·동작을·영등포갑·영등포을·광진갑·광진을)은 접전, 강남권(서초갑·서초을·강남갑·강남을·강남병·송파갑·송파을·송파병·강동갑·강동을)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각 정당의 우세와 접전 속에서 이번 총선을 가를 한강 이남의 격전지 민심의 향배를 살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 서남권 격전지 '강서을'·'양천갑'

총 10개 지역구가 있는 서남권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들의 '현역 프리미엄'을 극복해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0개 지역구 중 9곳에 현역 의원을 공천했고 관악갑에만 박민규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얼굴로 공천장을 받았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불어난 정권심판론의 바람이 서남권을 떠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중량감 있거나 신선한 후보를 내세워 격전지를 공략하려는 모양새다.

서남권의 격전지는 '강서을'과 '양천갑'이 꼽힌다. 강서을엔 민주당의 '전략통'으로 꼽히는 진성준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자 재선 의원 출신인 박민식 국민의힘 후

보가 맞붙는다. 강서을은 김성태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리 3선을 했을만큼 강서구 3개 지역구 중에서도 보수세 결집이 가능한 곳이다.

양천갑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으로 활약한 구자룡 국민의힘 후보가 붙는다. 양천갑은 인천 계양구에 출마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내리 3선을 한 곳이고 최근 4번의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번씩 나눠 이긴 곳이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곳으로도 꼽힌다.

◆ '총성 없는 전쟁' 중남권

중남권은 대부분이 접전 지역으로 꼽히며 서울 판세를 가를 중요한 권역으로 떠올랐다. 먼저 용산은 강태웅 민주당 후보와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의 리턴매치가 치러진다. 두 사람은 21대 총선에서 득표율 0.66%포인트 차, 약 3800표차로 강태웅 후보가 패배한 바 있다.

동작구의 2개의 선거구 가운데서도 동작을 지역구는 경찰 간부 출신 정치신인 류삼영 민주당 후보와 여당 중진이자 공동선대대책위원장직을 맡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상대적 열세로 평가받는 류삼영 후보를 지

원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지역구를 여러번 찾아 지원을 했지만, 나 후보의 중량감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여의도를 관할하는 영등포을 지역구도 총선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후보와 앵커 출신인 박용찬 국민의힘 후보의 재대결이 치러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시민들과 박 후보와 함께 출근 인사를 하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 '송파'와 '강동'에선 접전 주목

강남구와 서초구는 '보수일변도' 지지세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를 양보하고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홍익표 후보가 중편방송사 앵커 출신인 신동욱 후보를 맞아 선전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강남권에선 서초와 강남 이외에 송파와 강동에서 여야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서초와 강남만큼은 아니지만 보수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송파에선 조재희 민주당 후보와 박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갑지역구에서, 송기호 민주당 후보와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가 을지역구에서, 남인순 민주당 후보와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가 병지역구에서 맞붙는다.

강동갑에선 현역인 진선미 민주당 후보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을 치른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황명선 “시민이 주인인 고장 만들겠다”

총선, 이 후보가 궁금하다

野 충남 논산·계룡시 금산군 후보
고향인 충남 논산 지방행정 전문가
“尹, 서울집중화 방치... 지방소멸 우려”



황명선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후보(57)가 지난 23일 충남 논산시에서 열린 딸기 축제에 방문해 참가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황명선 캠프

황명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후보(57)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축적한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논산·계룡·금산 시민이 주인인 고장, 나아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헌신하고자 출마했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은 민주당을 떠나 새로운미래로 합류한 김종민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이지만, 김 의원이 세종갑에 출마함에 따라 새판이 짜이게 됐다. 이번 선거에선 황명선 민주당 후보, 박성규 국민의힘 후보, 이창원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

황명선 후보는 고향인 충남 논산에서 서울시의원과 3선 논산시장을 지낸 지방행정 전문가다.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선 당의 대변인을 맡으며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도 했다. 지방행정과 예산집행 전문가인 황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이 “한심하다”고 평가했다.

황 후보는 “대파 한 단, 사과 한 알 마음 편히 살 수가 없고 물가와 금리는 치솟는데, 월급과 일자리는 부족하기만 하다”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논산·계룡·금산의 주인은 주민이다. 머슴

이 주인 말을 듣지 않으며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정권심판론을 띄웠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특히,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역행해 서울 집중화를 방치해 지역은 더욱 피해해지면서 이제는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면서 “12년 동안 3선 논산시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농가가 많은 지역구에 특성상, 황 후보는 농업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정책이 아예없는 ‘농업포기’ 상태인 것에 분노하고 있다”며 “농업의 특성상 먼저 대출로 농사를 짓고 가을이나 추수기에 대출이자를 갚는데, 이자는 높아지고 비료나 원자재, 인건비 등 생산원가는 치솟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나 지원은 전무하고

유통과정도 엉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과 한 알에 만원이지만, 현장에선 2000원인 상황이다. 지역특산물인 딸기, 인삼, 갯잎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논산계룡금산 주민들께서 ‘못살겠다! 심판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부연했다.

황 후보는 중앙공약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입법화해 쌀값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지역사랑상품권을 개정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발전 6대 공약으로 ▲육군 사관학교 이전 추진 ▲스마트극방산업 단지 기업유치▲대실지구 이케아부지 개발 적극 추진▲맑은 물 공급(노후상수도관 교체)▲인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가기관 승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與, 의정갈등 속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

의료법서 간호사 업무범위 독립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다듬은 것이다. 법안명도 기존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바꿨다.

간호사법의 제안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수한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의 숙련된 간호사 양성 및 확보,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호법과 간호사법 모두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업무범위를 의료법에서 떼 내 독립적인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들의 진료공백을 간호사들이 부담하게 매우는 일을 법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안은 제11조, 12조, 13조를 통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또 정부는 간호사 1인



간호사들이 27일 서울 강서구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

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제27조),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제28조)는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제31조부터 35조까지는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복지부 장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를 뒤 간호사 양성 및 처우를 논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제30조의 경우 사실상 간호사가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인 만큼 의사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필요하다면 제도화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뉴시스